

##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장경섭\*\*

---

■ 국문초록 ■

---

이 글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만혼·비혼·이혼의 급증 등 다양한 가족인구적 격변상을 경제와 사회의 기본적 재생산체계상의 위기로서 설정하고, 이러한 위기가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적 근대성(산업자본주의화) 및 이차근대성(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물려 나타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압축적 근대성으로 요약되는 급격하고 복잡한 역사적 변화가 가족중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거시 정치경제 질서에 배태된 갖가지 경제·사회·심리적 위험의 가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인들은 갈수록 가족관계를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세기말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화 및 이에 맞물린 만성적인 사회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인들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광범위한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재생산체계 전체의 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사회재생산 추세를 구성하는 가족인구적 현상들의 분석에 있어 지역·계층별로 생활세계와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성을 내포한다.

주제어: 사회재생산, 저출산, 개인화, 압축적 근대성, 개발주의, 위험회피

---

\* 본고는 2010년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내일의 종언?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의 사회재생산 위기”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서 발표되었고, 보완된 내용이 2010년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추후 부분적 수정·보완을 거쳤다. 연구과정에 한국의 출산율 변화 등 사회재생산 동향에 대한 필자의 설명과 주장은 비록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용하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관련분야 국내 학자들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대한 학습에 기초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대한 중점연구소 지원사업(NRF-2007-411-J01601, J01602)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며 비교근대성(압축적 근대성), 비교사회체제, 가족주의 정치경제, 개발정치와 사회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E-mail: changks@snu.ac.kr

지금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보고서에서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생아수 비율) 전망을 이용해 2051년 이후 남북 인구를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천468만 명으로 올해 인구(4천887만 명)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 명으로 축소되고 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올해의 54%에 불과한 1천29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 2010.4.21.).

## I.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예측에 의하면, 지금부터 겨우 십 년 후인 2020년에 한국의 인구변화율은 -0.02%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기 시작할 것이다(연합뉴스, 2010.5.20.). 같은 해에 이른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 외에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만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인구감소세는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 그후 불과 10년만인 2030년에 인구변화율이 -0.25%로 열두 배가량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급속한 인구감소국이 됨을 뜻한다. 1970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2.21%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위의 20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빠르게 인구가 늘어났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인구변동에서조차 한국은 웬만한 나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압축적인 변화를 기록해가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제연합의 합계출산율 전망을 이용해 한반도 인구를 예측한 바에 따르면, 2100년에는 남한의 한민족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천468만 명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지금의 0.7%에 불과한 33만 명으로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10.4.21.).

이처럼 민족인구의 점진적 자연소멸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축소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진보·보수의 선을 넘어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을 핵심적 국정사안으로 설정하고 요란스럽지만 아직은 신통한 대책이 없는 듯한 정책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학자 및 전문가 차원의 다양한 논의와 대중매체의 꾸준한 추적이 더해질 뿐 아니라 아예 경제·사회 엘리트 전반의 관심까지 덧붙여지고 있다. 예컨대, 위의 기업연구소와 같은 기업집단(재벌)에 속한 삼성전자의 한 저명 경영인(윤종용)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10-15년에 걸쳐 아시아계 남녀 100만 명씩 모두 20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제안함으로써 큰 논쟁을 촉발시키기에 이르렀다(포브스코리아, 2010.4.26.).

인구의 감소는 출산율 하락, 사망률 증가, 인구 이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한국의 인구감소 전망은 사망률의 지속적 하락 (혹은 기대수명의 지속적 연장) 및 제한된 인구 이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출산율 하락이 관건이 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음과 동시에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이러한 상태는 당분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출산율은 다시 초혼 연령, 혼인율, 이혼율, 혼인 유지기간, 혼외출산 빈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달라진다. 초혼 연령 상승, 혼인율 하락, 이혼율 상승 및 이혼 연령 하락, (공식통계상의) 혼외출산 한정 등의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율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쉽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재생산’이라는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부양·살림 능력을 갖추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배우자를 부양·수발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련의 활동은 가족을 매개로 한 이른바 ‘사회재생산’ 활동이다. 인구의 증감은 이러한 사회재생산 활동의 (단순)집합적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한국인들은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심각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사회재생산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조차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막연히 미루거나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최소화할 뿐만아니라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고,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으로는 가족동반 자살까지 감행하는 사람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족 차원의 사회재생산 유보나

포기와는 별개로 개인 차원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무력감이나 회의감이 팽배함으로써 청소년과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한국인들이 그들의 강력한 가족주의를 포기하거나 나아가 새롭게 개인주의를 공고화시키는 사회문화적 변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한국에서 거시적 경제·사회·정치적 질서를 포괄하는 가족의존성과 이에 상응한 시민들의 가족중심적 삶이 여전히 확고하며, 이는 본 연구자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으로 명명한 한국사회의 핵심적 특질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독일 사회학자 Ulrich Beck이 ‘이차근대성(second modernity)’으로 명명한 탈현대적 문명 상황이 한국에서도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에) ‘압축적’으로 발생되어, 산업경제, 노동조합, 정부, 정당, 학교, 복지체계 등 이른바 ‘(고전) 근대적 사회제도’들이 급속하게 그 조직적 기초와 사회적 효용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은 가족(친족)의 기능을 확대·심화시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 문제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가족에게 압축적 근대성과 이차근대성의 중첩적 부하가 극도의 기능적 과부하를 야기하며, 가족관계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써 동원되는 동시에 복잡다기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을 전달·파생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험관리(회피) 차원에서 현대 한국인들은 혼인, 출산, 부양관계 등에 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재생산의 위기는 바로 가족주의자로서의 한국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위험관리 노력으로서의 다양한 (생활형태상의) ‘탈가족화(defamiliation)’와 ‘개인화(individuation)’에 기인한 것이다.

## II. 근대성, 가족, 개인: 압축적 근대성, 이차근대성

‘압축적 근대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시간·공간적 차원을 아울러 극히 단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이질적인 역사적 및 사회적 문명요소들이 동적으로 공존하면서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사회체계가 구성·재구성되는 사회적 상황을 지칭한다. 이 개념(이론)은 필자가 현대 한국사회의 총체적이며 비교사회적인 이해를 위해 고안한 것으로 그동안 이를 통해 개인, 가족, 사회 차원의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로서의 가족에 관한 연구

가 도출한 결론은, 한국의 산업화, 교육, 복지 등 근대화의 핵심 영역들에서 가족이 (서구에서 제시된) 고전적 근대화 이론의 설명과는 달리 과거보다 오히려 훨씬 확대되고 강화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개별적 혹은 사적인 노력으로 인해 나타나기도 했지만, 국가, 기업 등 산업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주도 세력이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극대화를 위해 가족을 전략적으로 통제·동원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가족은 전통·토착적 가족문화(이념)뿐 아니라 현대·탈현대적 및 서구·세계적 가족문화까지 수용해 이 다양한 문화에 내포된 복잡다기한 사회적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개인·가족 차원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의 가족은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사회제도로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극히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기능들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그러한 기능들의 과다함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 그 기능(이념)들 사이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가족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피로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으로서 가족의 ‘실효범위(effective scope)’를 축소시켜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즉, 결혼을 늦추고, 자녀수를 줄이고, 불가피하면 별거나 이혼을 감행하여 ‘형태적’으로 가족을 축소하는 행위에서부터 가족(친족)에 대한 일상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물질적 지원관계를 철회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을 축소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탈가족주의화가 아닌) 탈가족화 증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가족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탱해 온 압축적 근대성의 귀결로서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차근대성”은 독일 사회학자 Beck이 이른바 ‘탈근대성(post-modernism)’론에 비판적으로 대응하여 제시한 개념(이론)으로, 20세기 후반 이후에 서구 혹은 세계의 문명 변화가 근대성을 넘어선 새로운 원리에 의해 특징지어지기보다는 근대성 원리의 극단화와 범세계적 확장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사회·경제·생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Beck & Grande, 2010). 이는 Anthony Giddens가 “고

1) 장경섭(2009)의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를 참조했다. 가족자본주의(재벌) 문제를 추가로 분석하고 교육, 여성 등에 관련된 자료와 분석이 보완된 필자의 영문 저서인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Chang, 2010a)도 참조했다.

도근대성(high modernity)” 개념을 통해 주장하는 바와 상통한다. Beck은 Giddens의 이른바 “반영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논리를 확장해, 현대의 다양한 과학기술, 사회제도, 경제질서가 각 사회에서의 구체적 현실적합성에 상관없이 자본, 국가, 지식권력 등의 이해와 관행에 따라 “반영적” 혹은 무차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짐에 따라 (후기) 현대사회는 구조적인 “위험사회”로 변질되고 여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가 맞물려 궁극적으로 범세계적 차원의 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가 자리잡는 다는 주장을 펼친다(Beck, 1999). 이러한 이차근대적 상황에서 고전근대의 사회제도들이 구조적인 기능 퇴화나 상실을 겪게 된다고 Beck은 지적한다. 예컨대, 산업경제, 노동조합, 정부, 정당, 학교, 복지체계, 심지어 (핵)가족까지 지금까지 현대인들을 위해 수행해오던 기능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의 삶을 능동적·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거시적 경제·사회·생태 질서의 교란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화’는 이차근대의 문명적 요건으로서 진행된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이차근대적 상황은 이미 선진산업국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파상적으로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세기말의 (신자유주의적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와 이를 모면하기 위한 급진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전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을 넘어서는 숨 가쁜 속도로 한국인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재편해 나갔다.<sup>3)</sup> 특히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정리해고, (노동집약적)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생산의 자동화 및 해외이전은 지금까지 산업노동을 통해 국가적 발전전략에 참여해 온 대다수 한국인들을 일순간에 ‘문명적 미아’가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본구성 및 생산기반의 세계화, 과학기술 세계 선두권의 진입 등에 따라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체계가 효용을 상실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마저 거의 보편교육화되다시피 하여 대졸자 대다수가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2) 최근 일군의 사회과학자 및 철학자들이 ‘공동체주의’의 후기현대적 중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필자는 별도의 논문,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ization.”(Chang, 2010b)에서 Beck의 세계위험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여 각 사회 그리고 가족, 개인, 지역공동체 등은 세계화 과정 자체를 공격적으로 내재화시키는 반응도 보임을 지적했다. 이는 이차근대 상황에서 압축적 근대성이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수익을 거두기 어렵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본인과 자녀의 교육에 문명적 전력투자(투기)를 해 온 한국인들이 집단적 공황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정당 같은 정치사회적 제도들은 그 사회적 구성기반에서부터 이념·정책적 노선에 이르기까지 애초의 저발전 상태를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후기 산업사회적 재구조화를 요구받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개발국가’적 산업정책을 통해 개가를 올려 온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세계금융세력의 압박 하에서 정책적 혼선을 거듭한 끝에 1997년 환란을 초래했으며 또 이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채택한 노동배제적 산업고도화(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대다수 한국인들을 경제적 미야 상태로 몰아왔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극적 가족책임주의로 일관하며 충분한 공적재원 축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고용불안, 절대빈곤층의 급속한 확산, 세계최고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요구하는 사회보장 수요를 장기적·체계적으로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차근대적 혹은 신자유주의적 위험사회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Beck이 전망한 것처럼 개인주의화의 길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중심주의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Chang, 2002). 기업, 정부, 정당, 노동조합, 학교, 복지제도가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구조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한국인들은 주로 가족관계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나아가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 왔다. ‘IMF경제위기’ 와중에 수많은 부인들이 실직가장을 대신해 가족 생계비와 자녀(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 부업과 같은 비상 취업전선에 나섰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만성적 고용불안과 서민경제 위축은 결국 극심한 소득양극화를 초래했지만 국가를 통한 재분배적 ‘사회임금’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가족들은 은행, 신용카드 심지어 대부업체에까지 의존하며 당장의 생계비는 물론 주식, 부동산을 통한 대체소득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마련에 나섬으로써 환란 이후 가계부채가 4배 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4)</sup> 고학력화, 세계화, 고용위축에 따른 교육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가족들은 ‘기러기아빠’와 유학자녀를 보살피는 엄마 사이로 이산(離散) 상태에 있다. 수많은 노부모들은 대기업 위주의 양극화된 경제 질서 하에서 구조적인 경영 위기를 겪게 된 중소기업가 자녀를

4) 필자는 별도 논문인 “Consumer Credit Instead of Social Wage? Jobles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ization of Poverty.”(Chang, 2010c)에서 이를 ‘빈곤의 금융화’ 현상으로 분석했다.

위해 농지, 주택, 저축, 연금을 포기해야 했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막연히 교육기간만 늘려가고 있는 수많은 성인자녀들을 위해 중노년 부모들이 조부모 노릇을 시작하는 대신 부모 노릇을 연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에 속하고 ‘유병장수’가 보편화되는 현실에서 수많은 자녀와 자부가 여전히 ‘효(孝)’의 주체로서 최후의 사회보장 제도로 기능한다. 최소한의 신체·환경적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며 경제자유화에 돌격적으로 치달리는 위정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엄마들이 ‘촛불시위’의 선봉에 서고 사법수사와 보안사찰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예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Beck의 이차근대적 혹은 위험사회적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개인주의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가족주의자로 거듭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대응은 이미 압축근대적 상황에서 누적된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 및 이에 수반된 가족피로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켜 중국적으로 (탈가족주의화가 아닌) 탈가족화와 (개인주의화가 아닌) 개인화 현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게 되었다.

### Ⅲ. 가족주의 질서의 역설: 위험관리로서의 ‘탈가족화’와 ‘개인화’

통계청(www.kosis.kr)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에 이어 지속적 하락추세마저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2006년)이 1.65명이며, 미국(2.1명), 프랑스(1.98명), 스웨덴(1.85명), 영국(1.84명)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엿보이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미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는 상당 부분 혼외 출산율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 신생아의 1.8%만이 혼외 출생이었는데, 이는 2000년의 0.9%보다는 배로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었다(헤럴드경제, 2010.3.31.). 같은 해 일본의 혼외출산 비율은 2.0%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북구의 아이슬란드(65.6%), 스웨덴(55.5%), 노르웨이(53.1%) 등은 절반이 넘는 비율을 보여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대다수 한국인들은 (다른 동아시아인들과 함께) 자녀 출산을 여전히 고전적(가부장적?) 부부가족의 틀 속에서 고집하고 있지만, 막상 이러한 보수적 규범은



현실적으로 출산빈도(자녀수) 자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혼인 후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혼인 자체를 막연히 미루거나 쉽게 해체하기 때문에 아예 출산의 물리적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기혼자의 연령별 출산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가임연령 여성의 비혼(혹은 파혼)상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의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2009년에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전년의 남자 31.4세, 여자 28.3세보다 각각 0.2세, 0.4세 높아졌다. (이 수치들은 최근 신혼부부들 가운데 상당 비율이 만약의 이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세태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009년의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2건으로 2007년 7.0건, 2008년 6.6건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1980년에 10.6건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09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5건으로 2008년(2.4건)보다 0.1건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선진산업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009년에 5.1건으로 2008년 4.8건보다 0.3건 증가했다.

출산율뿐 아니라 초혼연령, 혼인율, 이혼율의 최근 수준은 지난 세기말과 비교하더라도 가히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인들이 흔히 ‘개인주의’ 사회라고 지칭해 온 구미 선진국들의 상응하는 추세에 근접하거나 아예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들이 막상 가족주의적 혼인 관련 규범에 있어서는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혼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혹은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비율이 2006년 기준으로 여전히 3분의 2에 가깝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1998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6)</sup> 이혼에 대한 태도는 더욱 보수적이어서, 2004년 기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이 5분의 1에 가까웠으며, “가능하다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이 40%나 됐으며,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비율은 겨우 7% 정도에 그쳤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혼 태도

5)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가족주의 사회들인 남유럽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Billari & Kohler, 2004).

6) 한국사회과학자료원(2008)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8』을 참조했다.

에 관한 이러한 비율 분포가 그 10년 전인 1994년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혼인에 대한 집착, 부부가족 내 자녀출산 규범, 나아가 가족주의 태도 일반은 한국사회가 규범적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주의화’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즉, 생활형태상 다양하고 광범위한 ‘탈가족화’ 혹은 ‘개인화’의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개인주의화’를 내포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sup>7)</sup> (여기에서 탈가족화와 개인화는 상당 부분 같은 추세를 지칭할 수 있지만, 탈가족화는 개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측면과 정도를 지칭하고, 개인화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측면과 정도를 지칭하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가족화와 개인화는 새로운 사회규범이나 문화적 가치의 창출 및 확산에 따른 한국인들의 적극적 변화추구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 생활현실이나 거시적 사회환경의 구조적·장기적 불안정에 따른 소극적 위험회피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사회의 개발주의시대를 특징지은 압축적 근대성과 신자유주의시대를 특징지은 이차근대성은 중첩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극도로 가족중심적인 삶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들은 엄청난 사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의 이면에 극단적인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를 겪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동원되는 동시에 복잡다기한 ‘사회적 위험’들을 전달·파생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세기 이른바 ‘IMF 경제위기’ 및 이를 신속히 모면하기 위한 급진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혁은 가족관계의 ‘자원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위험성’은 심각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인들의 가족관계가 Caldwell이 (현대사회의 출산전환 이론으로) 제시했던 (세대 간) “부의 흐름(wealth flows)”이 아닌 (모든 가족성원들 사이의) ‘위험의 흐름(risk flows)’에 의해 규정되는 추세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심대한 변화를 감안하여, 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세대 간 위험의 흐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회이론의 정립과 이에 기초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

7) 개인화 및 탈가족화의 다양한 유형 분류에 관해서는 필자의 별도 논문인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Chang & Song,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8) John C. Caldwell(1982)의 저서 『Theory of Fertility Decline』을 참조했다.

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이 개인별 보편 사회권의 직접적 보장이 아닌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의 조건적 사회정책 체계에 의해 제도적으로 증폭되어 왔다.<sup>9)</sup>

이와 관련해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한국인들의 가족관련 규범 중 이른바 ‘남아선호’ 태도는 최근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전통 가족의 부계(父系)·부거(夫居)제 원리가 현대의 가부장적 경제 질서 및 군사주의적 정치·사회질서와 맞물려 돌아가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사회·경제적 기회와 영광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돌아갔으며 가족들은 주로 남성(남편, 아들)을 통해 전략적 이해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구현상이 출생성비의 심각한 왜곡인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남녀 성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면서, 출산율의 추가 하락이 성비의 하락과 맞물리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의 자원성이 위험성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특히 남성(아들) 지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의 산업자본주의가 남성중심주의적이었던 데 비례해서 그 국내적 쇠퇴가 미치는 부작용도 남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그러한 정치경제적 질서를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통해 뒷받침한 데 비례해서 그 질서의 와해에 따른 가족내적 충격도 남성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남성이 갑자기 ‘위험한 성(risky gender)’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가족 차원의 위험회피 행태의 역설적 귀결로서 출생 성비 왜곡이 바로잡아지고 있다. (최근 출산율의 추가 하락은 비정상(도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져보려는 욕구가 사라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위험의 가족적 반영이 예전 같으면 무참히 제거(살해)되었을 수도 있는 여태아(女胎兒)들을 살리는 (혹은 처음부터 잉태되지 않도록 하는) 다행스러운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혼자 남겨지면 불행하게 될까봐 이 세상에서 함께 데려간다는) 영문도 모른 채 가족동반 자살(?)로 희생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빈번히 소개되는 끔직한 사건들 처럼, ‘환란(煥亂)’ 당시에 그리고 외형적으로 한국경제가 화려하게 재도약하고 있는 오늘날에까지 가족관계를 매개로 한 충격적 생명훼손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

9) 최근의 무상급식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에는 단순한 “좌파적” 물질적 재분배 욕구를 넘어 아동에 대한 위험사회적 보호 동기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넓게 볼 때, ‘노동계급’이 아니라 (“유모차부대”로 상징되는) ‘가족’이 주도한 2008년 ‘촛불시위’의 핵심적 성격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관리(도피)적 자살과 가족 살해가 상당수 한국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충격적 현실이 언론매체를 도배하는 일이 잦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 한국인들이 이제 둔감해져버리기까지 한 현실도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 IV. 개발시대, 위험(회피)시대, 사회재생산

1960년대 이후 한국인들이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온 ‘개발시대’는 1990년대 후반 이른바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전 개발시대의 희망과 활력을 반드시 되찾기를 바랐으나, 금융위기의 조기 진화를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에서의 무차별 노출을 받아들인 한국경제는 결과적으로 한국 노동인구의 집단적 배제와 소외를 가져왔으며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은 일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으로 변질되었다.<sup>10)</sup> 이 과정에서 개발시대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종언(終焉)을 고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구조적 금융위기의 반복과 같은 새로운 “세계위험사회”적 상황이 자리 잡게 되었다 (Beck, 1999).<sup>11)</sup> 이러한 추세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공격적 설계보다는 위험회피적 안전장치 마련에 골몰하는 청년인구가 급증하는 현실로 대변된다.<sup>12)</sup>

개발시대에서 위험(회피)시대로의 전환은 한국인들에게 사회재생산의 의미와 효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개발시대의 한국인들에게 사회재생산은 한편으로 (교육, 근로 등의 헌법적 의무로 규정되기까지 했듯이) 국가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조건 마련에 동참하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사회적 발전의 혜택을 개별적으로 실현시키는 장치이기도 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자녀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강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열심히 교육·훈련에 임하고

10)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윤증현)이 일자리를 한국 바깥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일자리를 없애는 생산설비 자동화 투자에 대해 정부의 지지(지원) 입장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힌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1) 필자는 이를 ‘개발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의 종언으로 규정한다(Chang, 2007).

12) 고시공부에 매달리는 대학생 인구가 또다시 급증한 것이나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서 갈구되거나 아니면 (단기 고수익을 노린) 주식투자자라도 해서 미래의 불안전성에서 벗어나겠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기회들의 제로섬(zero-sum) 성격을 감안할 때 결코 집단적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

누구나 결혼하고 예외 없이 자녀를 낳아 교육시켜 왔으며 한동안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음을 높은 중산층 귀속 의식을 통해 보여주었다(Chang, 2002). 필자가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로 규정된 정책노선 하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압도적 부분을 가족전담적 사회재생산 체계를 통해 직접 부담한 한국인들은 폭발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의 직업적 기회와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사실에 집단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그런데 위험시대로의 전환은 한국인들에게 사회재생산과 관련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재생산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위험을 가족에게 매개하는 딜레마를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자녀 교육비용이 최근에 더욱 급증하고 있지만 막상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약속되는 경제·사회적 기회는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어느 가정에도 예외 없는 현상이다.) 개발시대의 사회적 대전제였던 고용안정과 소득증가가 근본적으로 와해되고 있지만 사회재생산 비용의 가족 전담은 여전한 상황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사회재생산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 수행하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가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각오해야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딜레마는 사실 한국 농촌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선진국 따라잡기’식의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이에 수반된 사회변동은 극도의 반(反)농촌·농민적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개발시대는 일

13) 이처럼 암울한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들의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기만 하다. 반면 여러 국내 언론에서 매우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련 사회문제들을 다루어오고 있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제하의 기사들이 시사적이다: “신빈곤층 될 일 있다” 이유있는 ‘결혼 파업’”(경향신문, 2010.3.23.); “전통적 복지모형 안 통하는 ‘신사회위험’”(한겨레21, 2010.4.16.); “혼인신고 지연 - 위험분산”(매일경제, 2005.3.28.). 비록 이처럼 제목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최근의 대다수 관련 기사들이 마찬가지로의 문제의식을 직·간접으로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Beck의 ‘위험사회’론 같은 새로운 사회이론들을 바탕으로 깔고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현실에 객관적으로 천착하여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족 관련 사회문제들을 설득력 있게 기술·분석하고 있다. 주요 한국 언론의 당파성과 음모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근의 가족위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결집된 양상의 객관적·비판적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구체적 개인들이 삶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 왔던 가족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위험에 파상적으로 노출되는 새로운 현실이 좌·우 구분을 넘어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다.

마안가 농민들에게 위험시대로 다가오게 되었으며, 도시의 폭발적인 경제·사회적 성장과 맞물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도시화(농촌인구의 도시 이탈)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농업은 어느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직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sup>14)</sup> 이 과정은 농촌에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사회재생산 체계의 교란을 야기했으며,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재생산의 핵심 주체인 여성들에게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sup>15)</sup> 그 결과 여성들이 떠난 한국 농촌에 잔류한 남성(노총각)들은 사회재생산의 최소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에 ‘원정맞선’을 보러 다니는 처지가 되었고, 적어도 인적구성을 따질 때 한국의 세계화(cosmopolitization)가 농촌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급속하게 전개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Kim, 2011).

이처럼 한국 농촌에서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재생산 체계를 보완하려 드는 것은 가족농과 농촌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의 조직적 재생산이 없는 정상적 농업생산과 일상생활이 전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16)</sup> 이에 반해, 이제 도시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회재생산 체계의 교란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듯이) 외국인 신부(혹은 외국인 재생산노동자?)들을 동원해 봉합될 수준을 훨씬 넘어서며, 또 산업자본주의 체제 하의 한국의 도시인들이 굳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사회재생산을 위한 가족 형성에 나서야 할 근본적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적 사회재생산의 유보, 포기 혹은 실패에 대해 도시인들이 느낄 좌절감은 농민들에 비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산업자본주의 자체가 장기적으로 직면할 구조적 와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당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거리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동안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농업사회로부터 도시 산업사회로의 단축적 전환만 수반한 것이 아니고 도시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이고 급진적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구조화를 수반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을 추격하기 위한 동기에 기초했으나, 최근에는 폭발적 경제성장세에 있는 중국 등 후발산업국들에게 추격당하지 않기 위한 동기가 덧붙여졌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연속적 격변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생애사(working life history)의 구조적

1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94)을 참조했다.

15)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김주숙, 1994)을 참조했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신부감으로서 넓게 보아 유교문화권인 중국, 베트남의 (주로 농촌 출신) 여성들이 특히 환영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이들이 물질적 주부양자 역할을 맡는 가족의 만성적 생활불안 및 특정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단계에서의 심각한 생활위기를 야기했다(최선영·장경섭, 2011). 특히 지난 세기말의 “IMF 경제위기” 이후로는 산업구조의 전환뿐 아니라 산업조직의 급진적 유연화·슬림화가 보편화되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층 심각해졌다. 그리고 본격적 노동생애 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가족부양은 물론 일신의 생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세대에게 보편적이었던 유형의 가족생활주기를 재현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이들 ‘잠정적 독신’들이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 V. 국가주의적·가족주의적·개인주의적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21세기 한국에서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후기자본주의적 위험시대의 사회재생산 위기는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된 정책과 자원을 통해서만이 점진적이거나 대처할 수 있다. 전쟁의 위험에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의무징집된 병사에게 총, 군화, 모포 등을 각자 준비해 오라고 할 수 없듯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재생산을 거의 국민적 의무처럼 재촉 받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사회재생산의 기초적 자원과 수단들을 각자 알아서 마련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의 사회재생산은 Bryan Turner가 지적한 “공헌적 권리(contributory right)”로서의 시민권임이 어느 때보다도 확연하며, 이는 좌·우의 이념·정책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다.<sup>17)</sup> 특히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가족위기가 압축적 근대성과 이차근대성의 중첩적 작용에 의해 그 어느 사회에서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을 직시해, 종합적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을 통해 사회재생산을 ‘사회화’시키는 국가적 노력을 당장 ‘급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파업 중인 사회재생산 주체로서의 한국인들에게 (파업 중인 산업노동자들과는 달리)

---

17) Isin과 Turner(2007)의 “Investigating Citizenship: An Agenda for Citizenship Studies.”를 참조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시민권(그리고 인권)의 제약을 통해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외국인 산업고용 체계가 사회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재생산의 결과로서 다음 세대의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이 그런 식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큼 급진적이지 않은 사회정책으로는 어떠한 정책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사회재생산의 사회화는 21세기 한국에서의 시대적 요청이지만 그렇다고 한국만의 정치(정책)적 과제는 아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치밀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도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출산과 같은 사회재생산 행위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교훈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출산 등과 관련된 국가주의 및 가족주의의 극복이다.

먼저, 최근 한국에서 전개된 정부 주도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담론이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국가·사회(경제)적 ‘공공재성’을 인식·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개인적 위험(매개)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결국 출산동기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발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왜곡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계급·계층 간 및 세대 간) 사회적 통합성이 근본적으로 와해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가족주의와 맞물려 나타난 저출산 문제를 언어적 여과도 없는 인구정책적 대응요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은 정책적 현실성도 없고 정치적 규범성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 예컨대, 인구 연령구성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노년세대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부담의 급증, 생산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의 급격한 위축 등 거시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강조되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의 필요성이 국가(주의)적으로 제기될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모인 현 청년층으로서는 개인적 사회재생산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국가·사회적 차원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재생산에 관한 사회정책적 지원은 인구 유지라는 기술(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이라는 윤리(정치)적 관점을 통해 소통되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각자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높이고 그 집합적 결과로서 거시적 사회재생산, 즉 인구 유지가 귀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근본적 문제해결도 어려울 것이다. 이는 언어적 기만이 아니라 서구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다. 특히 출산과 출생의 주체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 및 행복을 국정의 진정한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사회재생산의 질적 및 양적 측면의 차이점으로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질적 측면에 관한 관심이 흔히 출산율을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적 가족계획사업의 구호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논리는 바로 사회재생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양적 제한’을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일반 한국인들의 태도는 ‘잘 키우기 힘들니, 낳지 말거나 하나로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사회재생산의 질적 측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양적 측면, 즉 출산율에 부적(否的)으로 반영된 것이다. 현재 국가는 논리가 분명치 않은 양적 재생산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것이 갈수록 재생산의 질적 측면에 치중하는 시민들에게 뚜렷한 체계적 효과를 갖기 어렵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를 물질적으로 안정시켜 출산율 회복을 꾀하겠다는 가족주의적 정책관도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sup>18)</sup> 가족관계의 위험(때개)성으로 인해 사회재생산의 제 단계가 왜곡되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책은 복지정책과 인구정책의 공통적 필요조건이지만 그렇다고 충분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재생산의 가족중심성은 그 정치적 모순과 위험뿐 아니라 물질적 지속가능성의 약화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와 보완을 요구받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질서 및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대다수 여성이 결혼해야 했고 결혼하면(시)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출산했던(나아가 여아 낙태를 거듭하며 아들을 낳아야 했던) 실질적인 ‘가족출산’ 시대가(시)가족 및 여성의 동시적 변화로 인해 갑자기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출산은 구체적인 가족 형태·구조를 반영하여 ‘직계가족출산’과 ‘핵가족출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도 불구하고(출산에 관한 시어머니의 권위로 집약되는) 직계가족출산 규범이 20세기 후반까지도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했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사회적 민주화와 청년인구의 경제력 향상으로 점차 젊은 부부의 자결권이 강조되는 핵가족출산 규범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치고 청년 세대가 다시 경제적 자율성을 집단적으로 상실하게 되면서 이러한 출산규범의 진화에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

18) 넓게 보아 농촌에서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여 사회재생산을 피하도록 유도(방치?)하는 것도 결국 가족주의적 정책관의 표현이다. 이른바 “다문화주의”는 가족주의에 종속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주의자’로 거듭나길 기대 받고 있는 것이다.

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페미니즘 확산과 맞물려 진행된 젊은 여성인구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강화는 핵가족의 가부장적 성격과 충돌해 핵가족출산 규범을 더욱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들이 직계가족출산 규범의 보편적 재강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 단위) 출산규범의 실종 사태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국가적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출산 규범을 보강하기 위한 재정적·사회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신혼 가정에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붕괴되어 온) 정규직 남성가장의 가족생계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장기적 재정지원을 할 수도 없으며 가정 내에서 (극도로 저조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로 드러나는) 부부관계의 가부장성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로 인해 결국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결국 생산·재생산 노동력으로서의 여성 동원의 극대화를 통해 경제체제와 가족문화의 모순을 보완하려는 미봉책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환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경제 활동, 부부·이성 관계, 모성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출산’ 시대의 보편적 확립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에서 지적한 가족관계의 위협(매개)성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 전문가들이나 정책관료들이 이제 내놓고 부러워하는 서구의 높은 혼외출산율은 가족이 출산하지 않고 여성이 출산하는 사회·정치적 변화의 산물이며, 사회해체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진화의 산물이다.<sup>19)</sup> 이러한 서구의 혹은 서구적 진화를 한국이 따라야 할 필요성이나 따르게 될 개연성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참여 및 양성관계의 민주화라는 역사적 변화를 한국과 서구가 공유하게 된 작금의 현실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결권 확대가 혼인지위에 무관한 대세임이 서구에 국한된 현상일 수 없다. 그런데 서구의 복지국가는 광범위하고 치밀한 모성 및 아동·청소년기 보호 장치들을 통해 출산에 수반된 신체·사회·경제적 위험들을 예방하거나 사회화함으로써 여성의

19) Beck과 Beck-Gernsheim(1995)의 저서 『The Normal Chaos of Love』 및 Giddens(1993)의 저서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를 참조했다.

출산에 대한 자결권이 (혼인지위에 무관하게)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결정적 작용을 해왔다.<sup>20)</sup> 이러한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사회정책이 서구의 복지국가 모형을 면밀히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여성출산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인구정책적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서구적 맥락에서 ‘여성출산’은 Beck이 지적하는 “제도화된 개인주의”의 핵심적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sup>21)</sup> 노동시장, 교육제도 등과 함께 복지정책은 서구의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구애되거나 의지하지 않고도 개인적 차원에서 안정되고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으며, 궁극적으로 자녀 출산·양육이 여성들의 개인(주의)적 모성 실현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문화와 규범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는 일종의 ‘제도화된 가족주의’가 여성의 (그리고 남성의) 일상적 삶과 사회적 재생산을 규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출생(출산)부터 양육, 교육, 생업, 노후부양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에 의지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규범적으로 강요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해 왔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국가와 사회가 가족부양 및 가정생활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부양과 생활의 책임을 전담하도록 요구·유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서구의 제도화된 개인주의가 개인(주의)화된 삶을 사회·경제적으로 지지·보호해주는 효과를 가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도화된 가족주의 하의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통해 자기 욕망을 형성·추구하고 사회적 참여(경쟁)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을 통해 매개되는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만성적으로 고통 받아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초저출산 경향 및 이에 직결된 비혼, 만

20) 이런 측면과 관련해 일부 보수적 논자들은 복지국가가 (여성이 남성 생계부양자 대신에 “복지국가와 혼인”하도록 만들으로써) 가족 해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전개하기도 하며, 역으로 일부 비판적 논자들은 복지국가가 가부장적 성격을 기초로 여성들의 사회재생산 전담을 지속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어떠한 입장에 서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이 일종의 ‘복지국가적 실버스폰’으로서 자기 부·모의 개별적 능력과 의지의 격차에 따른 성장조건의 불평등이 사전·사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비교적 공평한 행복을 누리며 자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1) Beck과 Beck-Gernsheim(2002)의 저서 『Individualism: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를 참조했다.

혼, 이혼, 별거의 급증 현상은 상당 정도 제도화된 가족주의의 모순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거나 완화시키려고 서구처럼 제도화된 개인주의를 사회·국가적으로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실행가능할지, 실행되더라도 당장 분명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불분명하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 국민들은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상황에서 더러는 가족지향적 지원정책에, 더러는 개인중심적 지원정책에 반응하며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등의 활동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문화적 다원성을 사회정책적 다원주의로 조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다원주의는 인위적 출산율 제고와 같은 기술관료적 혹은 사회공학적 목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지역, 민족, 직업, 혼인지위 등과 관련된 어떠한 차별도 배격하는 보편적 사회시민권 체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경향신문. 2010년 3월 23일자.
- 김주숙.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매일경제. 2005년 3월 28일자.
- 연합뉴스. 2010년 4월 21일자, 2010년 5월 20일자.
- 이화여자대학교 농촌문제연구소. 1994. 『한국 농촌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최선영·장경섭. 2011.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 평생고용체계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포브스코리아. 2010년 4월 26일자.
- 한겨레21. 2010년 4월 16일자.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편). 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대전: 통계연구원.
- 헤럴드경제. 2010년 3월 31일자.
- Beck, U. 1999.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Polity.
- \_\_\_\_\_ and E. Grande.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_\_\_\_\_ and E. Beck-Gernsheim. 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London: Polity.
- \_\_\_\_\_. 2002. *Individualism: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Billari, F. and H. 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76.
- Caldwell, J.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 Chang, K. 2002. "South Korean Society in the IMF Era: Compressed Capitalist Development and Social Sustainability Crisis." P. Masina(ed.). *Rethinking Development in East Asia: From Illusory Miracle to Economic Crisis*. London: Curzon. pp. 189-222.

- \_\_\_\_\_. 2007. "The End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Restructuring and Social Displacement in Post-Crisis South Kore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2(50): 62-72.
- \_\_\_\_\_. 2010a.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2010b.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44-464.
- \_\_\_\_\_. 2010c. "Consumer Credit Instead of Social Wage? Jobles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ization of Pover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es(IDEAs) Conference on "Reforming the Financial System: Proposals, Constraints and New Directions." 25-27 January 2010, Muttukadu, Chennai, India.
- \_\_\_\_\_. 2011. "Predicaments of Neoliberalism in the Post-Developmental Liberal Context." K. Chang, B. Fine and L. Weiss(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_\_\_\_\_ and M.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40-565.
- Giddens, A. 1993.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In, E. F. and B. S. Turner. 2007. "Investigating Citizenship: An Agenda for Citizenship Studies." *Citizenship Studies* 11(1): 5-17.
- Kim, H. 2011. "The Emerg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deriz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K. Chang and B. S. Turner(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9. 1. 접수, 2010. 12. 11. 심사, 2011. 7. 14. 채택)

## Abstract

### **Social Reproduction in an Era of ‘Risk Aversion’: from Familial Fertility to Women’s Fertility?**

*Chang, Kyung-Sup,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confronted extremely low fertility, drastic increases in late marriage, singlehood, and divorce, and a host of other radical familial and demographic changes. These symptoms, constituting a fundamental crisis in the basic social and economic reproduction system, are manifested as a consequence of the society’s family-centered modernity(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second modernity(neoliberal globalization). As the extremely fast and complex social changes, explainable as compressed modernity, have occurred in a highly family-centered way, various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risks embedded in the macro political economic order have been familialized. In this context, most South Koreans have increasingly faced a need to deal with family relations in terms of risk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accelerated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accompanying social and ecological crises since the national financial crisis of 1997-98 have induced widespread behaviors of risk aversion in South Koreans’ familial and individual life, which apparently prefigures a wholesale crisis of the entire social reproduction system. These trends seem to indicate a necessity that, in analyzing familial and demographic phenomena that constitute social reproduction tendencies, we should illuminate in detail how life world and political economy interact for different regions and classes.

Key words: social reproduction, low fertility, individualization,  
compressed modernity, developmentalism, risk aversion